

##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운동의 과제

황석만 창원대 교수, 사회학



87년의 봄부터 6월까지가 민주화항쟁의 절정기이고 승리의 시기였다면 그 해 7월부터 9월까지의 노동운동의 절정기였다. 1986년에 276건에 불과했던 쟁의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3,000건을 상회했고, 이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것이었다. 쟁의에 참가한 인원은 약 122만 명으로 추산된다. 노동자의 투쟁은 6·29선언 이후 중화학공업이 밀집되어 있던 울산에서 시작되어 부산, 창원, 마산 등으로 확산되었다가 8월 중순 경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경인지역으로 북상하였다. 이후 노동쟁의는 다시 중소도시의 사업장으로 확산되어서 8월 말에는 글자 그대로 전국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결과 노조 수는 86년의 2,600여 개에서 87년에는 4천여 개로, 조직률은 15%에서 17%대로 훌쩍 상승하게 된다.

6월항쟁에 힘 입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러한 노동자 대투쟁은 6·29 노태우 선언을 끝

어낸 6월 민주항쟁에 크게 힘 입었다. 87년 초부터 시작된 학생 시위에 뒤이은 중소기업인들, 화이트칼라 노동자 등의 참여는 6월에 이르면 시위를 점차 혁명적인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에 당황한 전두환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 6·29선언이라는 '민주화 전략'을 선택한다. 그 결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크게 신장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민주화가 노동자에게 억압적인 국가권력을 순간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의 공백기에 노동쟁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19혁명 이후와 박정희 암살 이후 1980년의 노동쟁의의 급격한 증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앞선 시기와 다른 점은 87년의 경우 단순한 일회적인 쟁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조직화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운동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떳떳하게 자신들의 뜻을 주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집단으로 이 사회에 부상하게 된 것이었다. 이전 시기에 노동자는 사용자의 눈치를 봐야 했고, 권력의 부당한 억압에도 대항할 수 없는 사회의 비천한 집단이었다. 사용자와 권력자들은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일하는 사람, 특히 육체노동자에 대한 뿌리 깊은 천시의식을 교묘하게 악용했고, 노동자들 자신도 이 관념을 내면화하여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87년 7월에 시작되어서 9월까지 지속된 노동자 대투쟁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일거에 바꿔 놓았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정부, 그리고 사회에 자

신들의 존재를 알렸으며 당연히 노동자도 인간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시켰다.

### 자율적인 집단으로 노동자 부상

하지만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노동자 대투쟁은 놀랍게도 세 달 만에 끝나게 된다. 그것은 정부의 강력한 탄압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국 노동운동이 노동운동 외부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6·29선언 이후 노동쟁의에 손놓고 있던 정부가 보수적인 언론 등과 손잡고 좌경운운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경찰과 검찰 등의 물리력을 사용하자 대투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사그라졌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운동의 후퇴 그 자체가 아니라, 6월 민주항쟁을 이끌어내었던 시민사회가 정부의 탄압에 침묵했던 점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적극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정부의 억압정책을 승인했던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는 폭발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고 다른 이유는 노동운동이 일정 부분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 시민사회가 노동 탄압에 침묵

오래된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시민사회는 정부와 언론이 노동자 투쟁에 빨간 색을 칠했을 때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투쟁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폭력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때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저항을 포기했었던 것이다. 일정 부분의 시민들은 노동자가 자신의 힘을 사회에 충분히 과시했고, 노동법도 일정 부분 개정되었으며, 수많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수십 퍼센트의 임금인상과 상당한 근로조건 향상을 이

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나친' 노동자들의 요구에 염증을 내었을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나치게 강력한 노동조합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만을 보호하고 반대로 다른 노동자,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노조는 대규모 사업장에 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높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좋은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 덕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노조가 조합원들만의 권익에만 관심 있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한다.

### 노조가 사회·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행동하기를

지난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는 엄청난 성공이었고 그 결과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성공의 결과가 이제는 일정하게 노동운동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성공'한 운동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으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조합원들만을 위한 노동조합이 아닌, 전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로, 노동자라는 협소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사회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서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곧 노조가 단순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사회 전반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은 특정 집단만의 운동이 아닌 사회와 함께 하는 운동 전략을 채택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만 노동운동은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6월 항쟁의 뒤를 이은 노동자 대투쟁의 성공과 좌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 사학

정전(停戰)은 종전(終戰)과는 다르다. 정전은 단지 양측의 사령관들이 전투상태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즉 전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중지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전쟁의 종결상태로 가려면 현지 사령관 차원이 아니라 관련 당사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의 종결과 평화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는 일종의 강화조약(講和條約) 내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의 정전협정 그 자체는 일시적인 전투상태의 정지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평화유지를 위해 비교적 세세한 규정들과 정교한 장치를 갖고 있다. 때문에 혹자는 정전협정 그 자체가 하나의 평화협정의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규정들이 얼마나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냐는 것이다.

### 정전과 종전은 달라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에 대한 규정이다. 이 중 군사분계선은 현재 대체로 준수되고 있다. 다만 해상에 분계선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관계로 서해 해상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군사분계선에서 군대를 2km씩 철수하여 도합 4km의 비무장지대를 두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가 된지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양측은 일찍부터 비무장 지대를 침범하여 각종 중화기를 반입하였고, 그 안에 각종 군사시설 및 방송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휴전협정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활

동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양측의 장교로 구성되며, 정전협정의 실행을 감독하고 유지하는 기구이다. 만약 정전협정 위반사례가 있거나, 정전 유지를 위해 양측이 협의할 것이 있으면 이 기구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다. 휴전 이후 양측은 수천 건이 넘는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제대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는 실질적인 토론과 협의라기보다는 양측이 서로 으박지르는 선전전(宣傳戰)이 되기 일수였다. 한편 1991년 3월에 휴전 이후 처음으로 유엔군 사령관이 국군 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하자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였고, 중국군 대표도 철수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군사정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은 양측이 협정의 체결 당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군인과 무기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병력과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대표로 이루어진 중립국감시위원회를 두었다. 또한 처음에는 남쪽의 5개, 북쪽의 5개 항구에 각기 중립국 '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병력과 무기의 도입 상황을 상호 사찰하였다. 그러나 각 항구에 파견된 중립국 감시소조의 활동은 분란 끝에 1956년 5월 종결되어 모두 철수했고, 무기의 추가적인 반입을 금지한 휴전협정 '13항 ㄹ목'도 1957년 6월 그 기능정지가 선언되었다. 1993년에는 체코 대표단이, 1995년에는 폴란드 대표단이 중립국감시위원회에서 철수해 버렸다. 때문에 지금은 스위스, 스웨덴 대표만이 남아 있고, 역시 이 기구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7천만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정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을 따름이지 다른 규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정전협정

정전협정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은 그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전협정 자체가 갖고 있는 틀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유엔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이 협정의 이행주체는 해당국가의 대표가 아니라 현지 사령관들이고, 정전협정에 귀속되는 군대도 역시 이들 사령관이 통솔하고 있는 군대이다. 따라서 이들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군대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이는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기존 정전체제하에서 풀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1968년 미국 정보선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되었을 때 북한은 이 배가 유엔군사령관의 관할이 아니라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관할이라는 점을 들어 이는 정전기구가 아닌 북미 두 나라의 국가적 차원의 협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1981년 8월 미국 정찰기 SR-71기가 서해5도 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북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 비행기가 원산, 평양을 잇는 선을 횡단하며 정찰활동을 했다면서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때 유엔군 측 수석대표는 '유엔군사령부가 통제하는 항공기 중에 SR-71 정찰기는 없다'라고 응수하였다. 결국 지금의 정전체제는 한반도와 관련되어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장치가 되지 못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다.

###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정전협정

또한 기존 정전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의 배제이다. 휴전협정 체결 당시 이승만 정권은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

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 또는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은 항상 여기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1968년 푸에블로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살해 사건, 최근 북한 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반복되었다.

양측 사령관들 사이의 정전협정을 국가적 차원의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현재 정전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실행 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유지를 위한 기구와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고, 남한도 여기에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동안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

### 남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되어야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근 남과 북, 미국, 중국 사이의 4자회담이 몇 차례 열리기는 했지만 핵 위기 등 급박한 사안에 밀려 평화유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항상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 물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관계의 재편성 같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도사려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그 동안 가급적 언급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토록 자신감이 없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7천만 한국인들이 반세기 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화산을 옆에 두고, 이미 엉성하게 된 정전협정이라는 우산을 받치고 화산재를 막으며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정전협정 50주년!

그 동안 전면 전쟁의 재발이 없었다는 면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전상태에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세계 역사상 가장 길게 이어지는 정전상태라고 한다. 이는 틀림없이 부끄러운 현실이다.